산업계 청정생산기술인력 양성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는 청정분야에 대한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인력의 수요를 예측, 관련정책을 수립코자 지난 7월 한달간 환경관련 연구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수도권소재 1~3종 사업장 등 28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정생산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청정생산기술"이란 생산공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 또는 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즉, 환경오염물질의 사전처리개념의 생산기술)

1. 청정생산기술의 중요성(예산확보)

산업계 및 연구기관은 청정생산기술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정(99%)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94%의 기관에서 청정생산 관련사업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예산이 현재 390억원 규모로, 향후 업계 및 연구기관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청정생산인력의 지속적 수요증가

청정생산기술인력은 '03.7월 현재 약 2만2천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국제환경규제 등의 강화로 향후 3년간 매년 약 2천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생산인력은 상기 88개 기관의 경우 '03.7월 현재 총 660명(청정설계 : 118, 기술개발 : 415, 환경경영 : 127, 기관당 평균 7.5명)이나, 향후 단기(3년 이내)에 예상되는 소요인력(현원 포함)은 801명(21.4%↑, 기관당 평균 9.1명), 장기(3년 이후)에는 996명(51%↑)으로 조사됐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정생산 인력수요에 대하여 청정생산 인력양성, 청정생산기술 보급 등 대응이 필요하다.

3. 청정생산기술인력 양성

청정생산관련 외부 전문기관이 단기교육과정(1~2주)을 개설시 89%의 기관에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동 교육에 응하게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청정생산관련 단기교육과정을 확대·보급할 필요성이 크다.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한 설문에는 78%가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외부전문기관(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단기교육과정의 대폭 확충, 전문가 Pool 구성 등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특히 중소기업들의 기술인력에 대한 단기교육을 강화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인 청정생산기술 보급·확산을 위하여는 81%의 기관에서 청정생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 기관은 향후 청정생산관련 전문교육 및 기술자격증 취득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적으로 청정생산관련 전문 국가기술자격증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조사결과 청정생산기술인력 양성은 주로 단기교육과정을 선호(89%)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단기교육과정('03년 : 9백명, '04년 : 1천2백명)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단기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소요되는 약 2천명 정도의 인력 조달을 위해 청정생산관련대학 등 졸업자(약 1백명), 사후관리(대기, 수질) 환경인력(현재 총 10만명)에 대한 재교육(약 1천2백명), 산업기술대학 등의 신규학과 신설 또는 전환 및 교육부와의 협의 등으로 나머지 부족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금년 10월중에 박사급 전문인력 수명을 채용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청정생산교육기관(기술대학 및 신규학과 설치) 확충

청정생산기술대학의 별도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에 달하고 또한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 등 모든 교육기관에 청정생산관련 신규학과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50%나 되어 향후 이에 대한 관련대학과의 연계 등 다각적인 협의·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향후 청정생산 교육기관 확충 등에 대해 관련대학과의 다양한 협의를 함은 물론 현재 청정생산기술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정생산 이전확산사업(교육·홍보)" 부문을 통해 신규학과 설치에 필요한 교육과목·교육내용 등을 도출, 이를 관련대학 등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